

버려진 반려동물, 보호소에서조차 쫓겨날 처지

광주시동물보호소 전임 소장 등 불법증축 민원에 철거 불가피 보호소 “유기동물 늘어나 과밀 상태...안락사 줄이려고 한 일” 전국 애견인 등 “동물들이 무슨 죄, 공격 멈춰라” 옹호글 쇄도

주인에게 버려져 광주에 단 하나뿐인 '광주시 동물보호소'로 들어간 반려동물 100여 마리가 동물 보호소에서 쫓겨날 처지에 놓였다. 광주시가 민간업체에 운영을 맡긴 동물보호소 우리(케이지) 일부가 불법 건축했다는 민원이 잇따르면서다.

광주시와 동물보호소 측은 “다른 광역 시·도와 달리 안락사를 최소화하는 과정에서 보호 중인 동물이 늘어나 불가피하게 증축이 불법으로 이뤄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민원에 따라 불법증축시설을 철거하게 되면 보호할 공간이 없어진다”고 난감해 하고 있다.

29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이날 들어서 “광주시 동물보호소에서 불법 증축이 이뤄졌고, 보호 동물의 과밀 문제도 심각하다”는 취지의 민원이 이어졌다. 민원은 국민신문고와 동물보호소가 있는 북구청 등에 접수됐다. 또한 동물보호소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관련 문제 제기가 잇따랐다.

민원 내용은 동물보호소 1·2층 창고나 직원휴게실, 마당, 보호복 복도 등에 추가로 설치된 견사가 불법건축물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서 증축된 시설물 철거를 요구하고, 적정 보호 두수를 유지하라는 내용이다.

민원을 낸 이들 중에는 지난해까지 동물보호소를 위탁 운영하던 동물단체 인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보호소 측에서는 과거 운영할 때 제기된 내부갈등 때문에 민원을 접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동물보호소는 유기동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유

실 동물의 주인을 찾아주거나 입양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지난 2011년 광주시 북구 본촌동에 개소해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동물보호소는 위탁을 맡은 업체가 나타나지 않아 동물보호 단체가 임시로 맡는 실정이다. 동물 보호소는 건물 2개 동에, 동물보호실, 진료실, 사무실을 갖추고 있으며 진료 수의사를 포함해 12명이 근무하고 있다.

점차 늘어나는 유기 동물에 동물 보호소는 2차례나 증축을 해 보호 적정 두수를 늘렸지만 버려지는 동물을 모두 수용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광주시의 설명이다.

2011년 개소 당시 동물보호소(면적 420㎡) 보호 적정 두수는 130두였다. 2011년 광주시 유기동물은 1842두였지만 2019년에는 3830두가 버려져 8년 사이 2배를 넘겼다. 이에 광주시는 2차례 동물 보호소의 시설을 확대했다.

2016년 1차 증축(126㎡ 확장)을 진행해 250두까지 수용 능력을 늘렸고, 2018년에는 84㎡의 면적을 더 늘려 350두까지 보호할 시설을 확보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 27일 기준 동물보호소에는 총 508두(개 220두·고양이 288두)가 지내고 있다. 여전히 유기동물은 늘고 보호시설은 과밀한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동물보호소는 지난 2016년 이전부터 마당과 복도 등 남는 공간에 사육 케이지를 붙이고 천장을 만들어 불법증축을 해왔다. 결국 불법 증축 공간(250㎡)이 일반견사(200㎡)의 공



광주시 북구 본촌동 동물보호소에 보호되고 있는 대형견이 지난 27일 불법증축된 견사에서 과밀상태로 생활하고 있다.

간을 뛰어넘게 돼버렸다는 것이 동물보호소의 설명이다.

동물보호소와 광주시는 유기동물의 안락사보다는 보호와 입양에 무게를 두고 있어 과밀 현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보호소 관계자는 “적정 두수를 초과한 것은 사실이지만, 생명을 함부로 할 수 없어 보호와 입양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 동물보호소의 최근 5년(2017년~2021년) 연평균 안락사 비율은 22.5%인데 비해 광주시 동물보호소의 안락사 비율은 9.4%뿐이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애견인들은 광주시 동물보호

소 게시판에 “아이들이(동물들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민원을 넣습니까” 등의 동물보호소 옹호 글을 올리고 있다.

광주시도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광주시 담당자도 “불법증축 부분을 확인했지만, 철거할 경우에는 당장 동물들이 지낼 공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철거결정도 쉽지 않다”면서 “광역동물 복지센터가 2024년 완공 예정이지만 그 이전에 해결방안을 고민 중이다”고 말했다.

글·사진·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장기 입원·수술비 환급 건강보험, 1인당 109만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가 장기 입원, 수술 등으로 큰 의료비 부담을 안고 있는 이들에게 의료비를 환급해준다.

공단은 2021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돼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액을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로,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총액이 일정한 기준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금액만큼 공단이 의료비를 대신 부담한다.

기준 금액은 소득분위에 따라 달라지며 지난해 기준으로 1분위는 81만원, 10분위는 584만원을 넘겨 의료비를 썼을 경우 환급 대상이 된다.

이번 환급액은 2021년 의료비 지출을 기준으로 정해졌다. 광주 4만 7351명에게 512억원을, 전남 9만 4035명에게 1072억원을 나눠 지급할 계획으로 1인당 평균 109만원의 의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단에 환급 신청을 해야 한다. 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과 신청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할 방침이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전화·팩스·우편·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공단에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본인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 지급동의계좌신청’을 하면 이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환급금을 자동으로 계좌에 지급받을 수 있다. 체납된 건강보험료 등이 있는 경우 환급금으로 보험료를 대신 납부할 수도 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민원실 수어 영상통역 제공 광주 남구, 태블릿 PC 이용

광주시 남구가 민원실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태블릿 수어 영상 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통역 서비스는 태블릿 PC 영상통화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이뤄진다. 청각장애 민원인과 담당 공무원 사이에 태블릿 기기를 두고 수어 통역사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3차 간 의사소통을 하는 식이다. 광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소속 11명의 수어 통역사가 교대로 영상통화에 응한다.

수어 통역 서비스 자체는 복지관을 통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식 활용용 사례는 광주에서 처음이라고 남구는 설명했다.

앞서 남구는 지난 23일 광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과 태블릿 PC를 통한 수어 영상 통역 역할을 수행하는 ‘스마트 민원 서비스 업무협약’을 맺기도 했다.

서비스는 남구청 10개 민원 창구 중 사회적 약자 전용 창구인 5번 창구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민원실 직원에게 수어 통역 서비스 지원을 요청하면 된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전남 행복주택 8곳 중 1곳 ‘빈 집’

7.9평 미입대율 75% 달하는 곳도

영암군 삼호읍 영암중앙3 행복주택의 전용면적 6.4평(21.28㎡) 미입대율이 40.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7.9평(26.39㎡)은 무려 75%의 가구가 비어 있는 등 공급 과잉으로 전남 행복주택 곳곳이 미입대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홍기원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평택갑)은 2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사(竣)을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공사는 6개월 이상 장기 미입대 상태인 가구를 기준으로 삼았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전남 지역 행복주택 공가율은 12.3%에 달해 여덟 가구 중 한 가구는 비어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 지역 임대주택 전체 공가 호수는 2019년 439세대(공가율 1.5%), 2020년 685세대

(2.2%), 2021년 728세대(2.3%), 2022년 1184세대(3.8%)로 증가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 지역에서도 2019년 257세대(0.6%)였던 공가 호수가 2020년 608세대(1.5%), 2021년 645세대(1.6%), 2022년 841세대(2%)로 늘어나는 추세다.

홍 의원은 작은 평수일수록 미입대 비율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수요가 적은 지역에 공급이 남치는 경우에 이같은 현상이 두드러진다고 짚었다. 또 미입대율이 높은 상황이 이어지면 공실로 인한 임대료 손실·관리비 부담이 커져 LH재정 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분석했다.

홍 의원은 “면적이 작은 세대를 통합해 전용면적을 넓히고, 지역별로 수요에 맞는 공급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공가 원인을 정확히 분석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공급하는 ‘수요맞춤형’ 주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수피아여중·고 ‘수피아 근대역사관’ 건립 추진 역사 테마관·전시공간 등 2025년 준공 예정

광주수피아여중·고가 교내에 3·1만 세운동을 기념하고 근대 역사 유물을 보존하기 위한 ‘수피아 근대역사관’(조감도) 건립 절차에 들어갔다.

광주수피아여중·고 총동창회는 다음달 1일 수피아 근대역사관 건립 추진 발대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날 총동창회에 따르면 역사관에는 근대 역사 유물을 보여주는 전시 공간, 1900년대 초부터 5·18민주화운동까지 이어지는 역사 테마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학교법인 호남기독교학원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건립비는 국비·지방비로 충당할 계획이다. 준공 예정일은 오는 2025년이다.

지난 1908년 유진 벨 선교사의 주도로 개교한 광주수피아여중·고는 광주지역 최초의 여학교



다. 1919년 광주 3.1만세운동의 발원지로 꼽히며 당시 운영생 열사 등 학생 23명이 항일 운동을 하다 옥고를 치르고 학교 차원에서 신사참배를 거부해 자진 폐교를 하기도 했다. 교내에는 100여 전에 건립된 윈스브로우홀, 수피아홀, 커티스 메모리홀 등 등록문화재가 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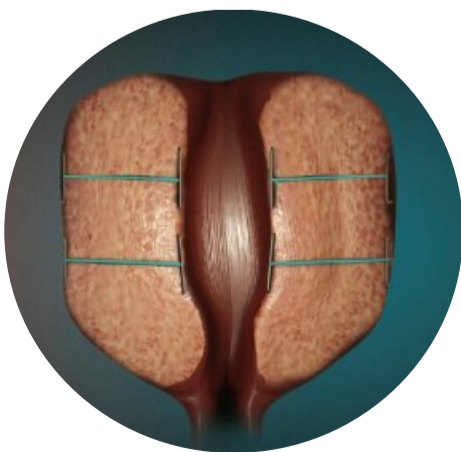
<광고>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 심의필 제220727-중-142427호

검사부터 수술까지 당일치로 지향

※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전립선비대증치료

이식형 결찰사를 이용한 전립선 결찰술



고령이나 고위험군 환자에서도 수술이 가능하도록 국소마취하여 짧은 시간에 수술 가능한 전립선비대증 치료방법이다.

수술 원리는 전립선을 묶어줄 수 있게 고안된 견인사를 내시경을 통해 결찰하여 막혀있는 전립선 요도를 개통하여 주는 원리다.

장 점

- ▶ 고령 및 고위험군에서도 수술 가능
- ▶ 국소 / 수면(의식하진정) 마취하에 수술 가능
- ▶ 심장 스텐트 시술 환자, 뇌졸중 환자 등 항혈전제 복용 환자인 경우 약물 중단 없이 수술 가능
- ▶ 짧은 수술시간 (15 ~ 20분 정도)
- ▶ 검사에서 수술까지 당일수술 및 퇴원가능

단 점

- ▶ 100g 이상 거대 전립선의 경우 치료 효과가 떨어져 적응증이 되지 않음
- ※ 수술 후 일시적 요폐, 요금 및 자극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전립선결찰술은 **장기간 전립선 약물치료를 원하지 않는 환자들**을 중심으로 수술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세밀한 검사와 수술이 당일에 진행되어 퇴원 가능하므로 일반적인 **일상생활에 거의 지장을 주지 않는 전립선비대증 치료방법**으로 선택되고 있다.